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1.06(금) ~ 2023.01.12(목)

제공일시 2023 01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1.06(금) ~ 2023.01.12(목)

제공일시 2023 01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英 식당·카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퇴출시킨다’

- 영국 정부가 이르면 올 10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접시 사용을 금지함 (뉴스트리, 2023.01.09) 김나윤 기자
-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줄이기 일환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접시, 수저, 폴리스티렌 컵 등에 대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이미 시행중임
- 다만,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가 퇴출되는 곳은 당분간 제한적인데, 식당과 카페, 테이크아웃용 제품만 사용금지 대상이고, 슈퍼마켓이나 상점 등은 규제에서 제외됨
- 2021년 11월 공개된 협의문서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해당 품목이 ‘1차 포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지대상에서 제외했음

2. 미 바이든 행정부, 수송부문 탈탄소화 전략 발표

- 바이든행정은 2050년까지 미국 교통부문의 탈탄소화 국가 청사진을 발표했음 (ESGToday, 2023.01.10) Mark Segal 기자
- 이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자동차(전기차), 육로, 항공, 바다 등 사람과 상품의 운송수단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탈탄소화 청사진임 (바이든 행정부 공식 문서)
- 운송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 정책과 규제 이행, 충전인프라 투자, 차량 배터리 및 충전기 성능 개선 연구, 혁신자금지원, 중간차량(MHDV) 화석연료 차량 대체기술 등이 제시됨
- 2030년까지 단기적인 조치는, 모든 운송 모드에 국제 기준에 맞는 목표 설정, 청정기술 개발투자, 공정 전환 보장을 위한 장기계획(2040-2050) 등이 포함됨

3. 제롬 파월, 연준은 ‘기후정책 입안자’ 되지 않을 것

- 제롬 파월 FRB 의장은 “연방은행은 의회가 정한 권한을 벗어나는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CNBC, 2023.01.10) Emma Newburger 기자
- 이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주최한 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FRB가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따른 것임
- 파월은 기후와 관련된 문제는 연방정부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기후 대처 정책 결정은 선출된 정부 부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명시적 법률이 없다면 녹색 경제 촉진이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이나 감독수단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음
- 연준은 지금까지 2개의 내부위원회를 만드는 등 기후변화 대처에 발벗고 나섰으며, NGFS에 가입했지만 파월의장은 FRB의 규제권한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좁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1. 다보스포럼 16일 개막...尹대통령 등 국가리더 52명 참석

-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각국 정부를 이끄는 52명의 정상급 인사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 명이 모일 예정임
- 올해로 53번째인 WEF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으로,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전쟁과 갈등, 경제 위기,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다뤄질 예정임
-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도 이번 WEF에 대거 참석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회의장에 나올 예정임

(연합뉴스, 2023.01.11) 안희 기자

2. GM·포드·구글 손 잡고 ‘가상발전소’ 뛰어든다...전력 효율 ↑

-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구글이 함께, 전력이 부족할 때 전력망 부하를 완화하는 재생에너지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예정임
- 이는 미국 자동차 회사와 구글이 VPP에 뛰어든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이 혜택을 보면서 VPP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임
- 이들 기업은 에너지전환 비영리단체인 RMI이 이 파트너십을 주도하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상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분야 협업체인 ‘가상발전소 파트너십(VP3)’을 발족했음
- 가상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되면 완충된 전기차에서 전기를 방전시켜 소유자들이 남는 전기를 팔 기회도 생기는데, 전기가 쌀 때 충전을 한 뒤 전기가 비쌀 때 되파는 방식임

(이데일리, 2023.01.11) 김상윤 기자

3. 한국 수소산업계 미국과 협력 논의 본격화 시동

- 한국과 미국의 수소산업 활성화 및 양국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칠 예정임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이하 H2KOREA)는 오는 2월 7일, 캘리포니아 LA에서 개최되는 ‘2023 수소 및 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한국이 주빈국(Host Country)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 이 행사에 참여하는 H2KOREA, 현대자동차, SK E&S, 고려아연, 미코파워, KOREA H2 Business Summit 등은 12일,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참여 기관·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및 발대식을 가졌음
- H2KOREA를 비롯한 한국 대표 기업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행사 기간 동안 ▲한-미 수소협력 라운드테이블 개최 ▲주빈국 특별세션 주관 ▲한국 홍보관 운영 등 주빈국 특별 행사를 할 예정임

(에너지데일리, 2023.01.12) 조남준 기자

1. 메르세데스-벤츠, 글로벌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출시

- 메르세데스 벤츠가 북미, 유럽, 중국 등 전 시장에 걸쳐 1만대 이상의 고효율 충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EV 충전네트워크 출범 계획을 밝혔음
- 이 네트워크는 호환기술을 갖춘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 개방되지만 대기시간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예약기능, 장거리 이동 편의성을 통해 벤츠 고객에게 우선 접근권을 줄 방침임
- 네트워크 구축은 올해 북미 전역에 400개 이상의 거점을 설립하고 2027년까지 2500개 이상의 고효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파트너로는 미국의 태양광 및 배터리 스토리지 농영자인 MN8이 있으며, EV 충전네트워크 기술회사인 차지포인트도 포함돼있음
- 벤츠는 2030년까지 자동차 기기의 전력화 계획을 위해 400억유로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으며, 지난해 2030년까지 승용차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음

(ESGToday, 2023.01.06) Mark Segal 기자

2. 블랙록 “침체·고금리·中 재개방 난기류 대비해라”

- 9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올해 경기 침체와 높은 금리, 중국의 경제 재개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전망했음
- 블랙록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선진국 시장에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음
- 또한 블랙록은 경기 침체로 연방준비은행(Fed, 연준) 등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일시 중지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범위로 치솟을 위험을 감안할 때 인하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이에 더해 블랙록은 또 중국의 경제 재개도 시장 변동성을 일으킬 재료라며 선진국 시장이 경기 침체, 높은 금리와 싸우는 동안 중국 재개방은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영역에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음

(SBSbiz, 2023.01.10) 임종윤 기자

3. 다농, 플라스틱 사용으로 고소

- ClientEarth, Surfrider Foundation Europe, Zero Waste France 등 환경 및 법률 캠페인 단체는 세계적인 식음료 회사인 다농을 상대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처하고 환경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음
- 다농은 에비앙, 볼빅, 액티비아 등의 브랜드에서 2021년 포장용으로 75만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사용한 기업으로, 상위 10위에는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 유니레버, 몬텔리즈, 마스, P&G, 필립모리스, 페레로그룹이 포함돼있음
- 이 단체들은 다농이 다농이 플라스틱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프랑스 '경계의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에서 영업하는 네슬레 프랑스, 다농, 맥도날드 프랑스, 까르푸를 포함한 몇몇 식품 회사들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함
- 이 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운영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방지하기 위한 경계계획을 수립해야 함

(ESGToday, 2023.01.09) Mark Segal 기자

1. 삼성전자 투과율 88% EUV 펠리클 개발...핵심부품 내재화

- 삼성전자가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투과율 88% 펠리클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국산화에 다가섬
- 삼성전자가 EUV 펠리클 개발에 뛰어든 건 미래 수요 대응과 공급 다변화를 위해서임
- 업계에서는 올해 EUV 펠리클 수요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현재 EUV 펠리클 시장은 EUV 노광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미쓰이화학이 선점하고 있음 펠리클 수급이 본격화되면 외산 제품 의존도가 높아짐
- 아직 펠리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삼성이지만, EUV 수요가 늘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선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르면 1~2년 안에 국산 EUV용 펠리클이 상용화, 양산 라인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음

[\(전자신문, 2023.01.10\) 권동준 기자](#)

2.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 1388억원 투입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함
- 올해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전년(979억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함
- 공모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음

[\(투데이에너지, 2023.01.09\) 차기영 기자](#)

[\(이투뉴스, 2023.01.09\) 채덕중 기자](#)

3.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 발족...기업 탄소중립 지원한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 감축활동을 평가해 감축성과를 인증하는 전문조직인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했다고 12일 밝혔다
- 탄소감축인증센터는 기업의 제품, 기술, 서비스를 통해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과 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표준'을 마련했음
- 인증표준은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 관련 글로벌 표준으로 평가되는 청정개발체제(CDM)와 민간 인증기관인 미국 베라, 스위스 골드 스탠다드 등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만들었으며,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임
- 인증센터는 신뢰성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 소요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임

[\(연합뉴스, 2023.01.12\) 장하나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1.06(금) ~ 2023.01.12(목)

제공일시 2023 01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선도 기업으로 평가 받았지만 세금 미납... 투자자, 세금 투명성 강화 목소리 커져

(2023.01.13, 임팩트온) 송선우 기자

- 그동안 ESG 관련 법안 및 규제가 가속화되면서 세금 부문에도 변화가 있었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수소, 탄소포집 등의 친환경 기술에 대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유럽은 탄소국경제도(CBAM)를 통해 탄소배출집약도가 높은 철강, 시멘트 등의 섹터에 탄소세 부과를 결정함
- 그동안 대부분의 글로벌 정책은 세금부과 및 감면을 '도구'로 활용해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ESG활동 촉진을 도모했음.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논란이 되면서 세금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ESG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메타,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위시한 글로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버뮤다 등의 조세회피처를 사용하거나, 각종 꼼수를 통해 절세 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임. 여러 국가가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제동을 걸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바 있음
- 美 조세 및 경제정책 연구소(Institute of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 ITE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미국 대기업 379개의 실세효율은 11%에 불과했으며, 세금을 일절 내지 않은 기업도 무려 60개나 됨. 여기에는 ESG 선도기업으로 평가받는 나이키, 아마존, 세일즈포스 등도 포함됨.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모두 다른 곳에 납부한 것임
- 반면 중소기업의 실세효율은 19.8%로 대기업과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남.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ESG경영을 내세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금 투명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보이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작년 5월, 기관투자자들이 아마존 측에 결의안을 제출하여 세금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음. 이들은 GRI표준의 207번 항목(세금 분야)에 기반해 세금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함
- 해당 표준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GRI207-4번 항목으로 이는 국가별 세무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함.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 납부 국가와 납부 내용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공시해야 함. 즉,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무정보 숨기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임
- 다른 빅테크 기업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음. 지난 12월에는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한 결의안이 투표에 부쳐졌음
- 결과적으로, 위 세 가지 결의안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으나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음.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 영국최대 자산운용사 LGIM, 모닝스타 등의 주요 금융기관이 해당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세금 투명성에 대한 투자계의 관심이 높아졌음
- 올해에도 투자자들의 세금 투명성 강화 요구는 계속될 예정임. 지난 11월, 옥스팜(Oxfam)이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 필립스에도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빅테크 업체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업계에도 세금투명성 강화를 요구했기 때문임. 해당 결의안에 대한 투표는 오는 3월 이루어질 예정임
- 글로벌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세금 규제가 시작된 것은 2021년 EU가 국가별 보고(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 pCBCR) 지침을 제정하면서부터임. 지침에 따르면, 글로벌 연 매출 7억5천만유로(약 1조 86억원) 이상 기업과 자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국가별 매출 및 납세내역을 공개해야 함. 다만 정보 공개는 EU 27개 회원국과 EU 조세회피처 블랙·그레이 리스트 등재 국가에 한정됨.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별 임직원 수도 함께 공개해야 함. 해당 지침은 2023년 6월까지 모든 EU국가에서 국가법 차원으로 적용될 예정임

- 또한 지난 10월, G20 국가들은 글로벌 기업의 실세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함. 이들은 올해 말까지 해당 사안을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실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 교수 시바람 라조팔 (Shivaram Rajgopal)은 “GRI207표준과 EU의 pCBCR 지침이 세금투명성 강화를 위한 좋은 시작인 것은 맞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며 ‘기업 세금 투명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무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납세 정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임